

인천교육을 들여다보다, ZOOM IN

이슈 줌인

'이슈 줌인(Zoom In)'은 정책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인천교육 현안을 집중 조명하는 소식지입니다.



-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
- 인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 블렌디드 수업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일 2020년 9월 21일

홈페이지 <http://ice.na.to>

디자인·인쇄 신촌디자인인쇄

[이슈 줌인] 에 원고를 투고하시거나, 메일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420-8207

✉ bsooa@ice.go.kr

※ 본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 04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설규주)

인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태수)

블렌디드 수업과 교육과정-수업-평가.....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배수아)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목록(2015-2020).... 44



01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설규주

1.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오해

1) 무슨 ‘시민교육’이 이렇게 많을까?

학교 현장에는 참 많은 ‘○○교육’이 있다. 국어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과 같은 교과교육도 많지만 그래도 교과교육 수는 10개 안팎으로 그나마 적은 편이고 계기교육, 창체, 범교과학습에 관련되는 각종 교육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한 예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학습 주제는 무려 39가지였다. 해양교육, 청렴·반부패교육, 논술교육, 녹색교육 등도 그 많고 많은 ○○교육의 일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학습 주제가 10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교사는 피곤하다. 기본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과교육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까지 틈틈이 해야 하니 버겁다. 교사가 피곤하니 학생도 피곤하다. 초중고 교육 기간 12년 전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단 1년 동안에도 학생들은 교과교육을 비롯해 많은 종류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현장에는 ○○교육뿐 아니라 ○○시민, ○○시민교육도 많다. 민주시민, 통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소비자시민교육 등등...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시민교육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교육이 그냥 ‘언제 실시되었다’는 기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들인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학생의 미래와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 실시하고 있는 이 같은 시민교육을 좀 더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한데 모아 놓고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는 작업은 시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시민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도 여러 가지

시민교육을 표현하는 용어도 많다. citizen education, education of citizen, civic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등이 있다. 앞의 둘에는 교육의 규범적 의미와 성격이 뚜렷이 담겨 있지는 않다. 다소 소박한 의미에서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국가 기관이 아닌) 시민이 주체요, 대상이 되는 시민교육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이쌍철 외, 2019).

우리나라의 시민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civic education과 citizenship education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을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따라 시민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범주와 특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civic education과 citizenship education 중 어느 하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 공동체를 주로 국가로 한정한다면 civic education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civic education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공민교육(公民敎育)’이라는 이름으로도 종종 불린다. 그 공동체가 지역, 국가, 세계 등으로 다양화된다면 citizenship education의 의미가 더 강조될 것이다. citizenship education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서울대 교육연구소, 1998).



3) 왜 그냥 시민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까?

시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은 다양한 수준의 민주적인 공동체, 민주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은 곧 민주시민과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하다(곽병선 외, 1993).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시절부터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구성원은 군주국의 백성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 ‘민주’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시민교육은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많은 영향을 준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는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지역의 사회 집단은 물론 세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교육은 ‘민주’라는 말을 굳이 앞에 붙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처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도 충분한데 굳이 ‘민주’라는 단어를 붙여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환기하면서 시민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답게 실시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방법이나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던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이쌍철 외, 2019).

4) 이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년 민주주의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아 2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에 관한 한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일상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정문성 외, 2018). 우리에게는 갑질, 혐오, 미투,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 일상생활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제도 개혁만으로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시민교육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높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그리 많이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문화가 민주적이라면 그 곳이 곧 미래 세대가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자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문성 외, 2018).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청은 계속될 것이다.

5)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은?

2018년 12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원규 등(2019)은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으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권자’라는 개념이다. 주권자는 단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주권을 누리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권자는 왕 아래 있던 신민(臣民)과 대비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는 물론 지역, 세계 등 다양한 차원의 공동체에서 자기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판단하는 결정권자로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설규주 외, 2020). 이러한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시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체제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정치 참여, 인권,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6)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1) 민주시민교육은 정부 주도의 국민정신교육?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사회과(사회생활과)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시민교육을 담당했던 사회생활과의 목표는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사회생활에 성실하고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목표는 3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다.

4차 교육과정(1981년)에서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지만 5차 교육과정까지는 학교 급에 따라 ‘민주시민’, ‘국민으로서의 자질’, ‘민주국가 국민’ 등의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교육’ 또는 ‘국민정신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¹⁾ 한 예로 1984년에 정부는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을 발표했는데 당시 학생들은 이 9가지 덕목을 구구단처럼 암송하기도 했다.²⁾

국민정신교육은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국가 체제의 정당성,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곽병선 외, 1993).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은 정부가 원하는 가치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제 교육이라는 오해가 일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러한 과거와 관련이 있다. 과거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가 주도하여 실시하였고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념을 표방하는데 활용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승희 외, 2002). 물론 시민에게도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정당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시민은 국가의 관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시민의 그러한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주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일부라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은 정부의 입김 아래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교육 체제를 활용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특정한 관점이나 사상이 주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定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1980년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에서 그 제도와 질서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되고 또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교양교육이나 도덕교육이 행해질 때 그것은 국민정신교육 또는 국민윤리교육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이영춘, 1980).

2)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 협동심, 시명감, 준법정신,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

(2)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 준법교육과 동의어?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와 실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논의하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도 바로 독일 정치교육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교육’이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독일과 인류 전체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나치즘을 청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나치즘을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의 사회과 관련 과목을 도입하였다(차조일 외, 2013). 더 나아가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라는 이름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이후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정치학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나 정치 과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판단, 개인의 자주적 결정과 책임, 공공생활 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였다(김성수 외, 2015).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곧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에 대한 지식 교육이나 선거교육,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준법교육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에서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 정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도 독일 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은 물론 개인과 사회,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젯거리와 맞닥뜨리는 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3) 민주시민교육은 국내 문제만 다루는 교육?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이슈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국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 국내 관련 이슈는 민주시민교육이, 국제적 사안은 세계시민교육이 맡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 국내적인 것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민주시민교육은 대체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모습이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점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성찰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지구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5). 이렇게 본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그 속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국내적인 이슈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은 민주시민교육이 범교과학습 주제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가지 범교과학습 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 주제

주제명	관련 내용요소
안전·건강교육	안전·재난대비, 성, 보건, 영양·식생활
인성교육	인성(효도·경로·전통윤리), 생명존중 및 자아정체성
진로교육	진로탐색, 창업(기업가)정신, 근로자, 여가활용
민주시민교육	자유와 평등, 청렴·반부패, 법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아동, 청소년, 장애인, 양성평등 등), 폭력예방(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노동인권
다문화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국제이해)
통일교육	통일대비, 국가정체성, 호국보훈, 나라사랑
독도교육	영토, 독도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복지와 세금, 지적재산권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환경·녹색, 물보호, 에너지, 농·수산생명

출처: 교육부(2015a, 2015b)를 재구성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 10개 주제 중 하나로서, 그리고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과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폭을 너무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환경, 인권, 평화, 다문화 등과 같이 단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지 않는 지구적인 이슈는 굳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이나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통해서 다루면 될 것 같은 인상을 받

게 된다. 실제로 <표 1>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 속에 들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자유, 평등, 청렴, 반부패, 법 등 굳이 국제적이지 않아도 되는 내용 요소로 하고 있다.

물론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도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이 곧 민주시민교육을 국내적인 이슈로 축소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하위 주제나 내용 요소로 제안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원규 등(2019)은 범교과학습 주제를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공적 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 요소를 <표 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특히 평화·지구촌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시민 관련 이슈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표 2>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별 내용 요소 (안)

시민생활영역 ³⁾	주제	하위 주제
공적 생활 영역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실천
	인권	- 인권의 의미와 역사 - 인권 침해의 유형과 양상 -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다문화	- 다양성의 가치 - 문화 다양성의 양상 - 다문화 사회의 소통과 공존
	경제·금융	- 바람직한 소비 생활 - 건전한 금융 생활 -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적 대응
	평화·지구촌	- 남북통일과 우리 영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 - 전 지구적 문제의 유형과 양상 (환경, 전쟁, 자원 등)
	미디어	- 미디어의 유형과 기능 - 미디어와 정보 불평등 - 미디어 리터러시
	노동	- 노동의 의미와 가치 - 시민의 삶과 노동 -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3) 이 연구에서 시민의 생활 영역은 개인 생활, 대인 관계, 공적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서는 그 중 공적 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 주제와 내용 요소를 제시한 것이고 이 외에도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안전·건강, 진로를, 대인 관계 영역에서는 인성을 각각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로 배치하였다(정원규 외, 2019).

2.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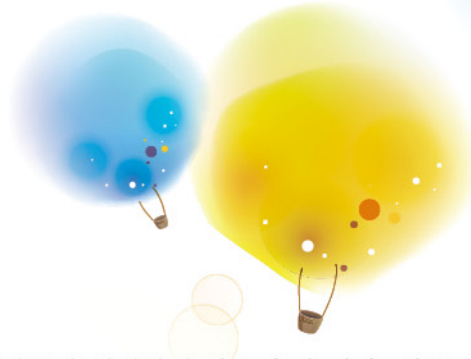
1) 우리나라 내부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우리나라가 그리 큰 나라는 아니지만 면적 대비 인구가 많고 참 역동적이어서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슈가 이슈를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고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할 국내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일까?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국민국가(nation-state)의 시민성이 풍미하던 시기였다.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이었다. 대략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즉 세계화로 대표되는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기 이전의 시민성은 주로 국가적 시민성(national citizenship)으로, 시민교육도 국가 발전과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설규주, 2001).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전까지 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국제 교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가속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가적 시민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탈국가적(postnational)’ 시민성이 대두하였다. 탈국가적 시민성은 지역적 경계, 즉 국경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을 발달시켰다(Soysal, 1998). 이와 함께 이제는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를 고려하는 시민의 자질 없이는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환경, 평화, 반전, 인권 등과 같은 지구적 쟁점은 물론이고 2020년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나라는 전 세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13개국이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나라만 150개가 넘고 10,000명 이상인 나라는 100개에 육박한다. 많은 나라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이른바 ‘언택트(Untact)’ 체제로 전환했지만, 불과 3-4개월 만에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경 폐쇄나 경제 봉쇄를 하지 않고도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잘 한다고 해서 지구적 차원의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면서도 지구촌 상황을 주시하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들을 일단 격리하고 치료해야 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의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과 정보, 자본, 기술 등을 일정 부분이라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지구촌의 상호의존성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면 문제가 산적한 오늘날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세계시민성이 요청된다. 세계시민성은 어느 특정 국가나 집단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다. 그 경우 진정한 성찰과 실천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세계시민의 자질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초국가적 반성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 인권, 평화, 구호(救護), 테러리즘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이나 지역, 국가의 입장을 잠시 떠나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곧 특정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성을 가리킨다.



3)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1) 외국어를 잘하면 곧 세계시민?

우리는 흔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잘하거나 국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글로벌’하다고 한다. 대학입학 전형의 하나로도 사용되는 ‘글로벌 인재’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도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 해외에서의 생활 경험 등이다.

물론 국제적 이슈에 접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외국어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자원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외국어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유용한 소통의 도구로 삼아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를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세계시민의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외국어를 일정 부분 다루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하지만, 단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신 그 과정에서 해외의 다양한 상호작용, 지구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시민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지구촌에서 보편적 가치가 더 많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2) 세계시민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

세계화 현상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면 세계시민교육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전략으로서의 세계화는 지구촌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더 초점을 둔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부국강병식 사고방식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 개념을 취할 경우 세계시민교육도 한국인의 세계무대 진출에 요구되는 각종 국제적 기능 함양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본질은 특정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 민족, 인종, 집단, 문화 등이 서로 대응하고 공평한 관계 속에서 인류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존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가진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임’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면서 휴머니즘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이든 내국인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느 지역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동일한 생명체로, 인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위와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이상에 다름 아니다.

3.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오해

1) 세계시민교육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동아시아시민교육인가?

동아시아라는 존재를 그냥 외면하고 세계로만 눈을 돌리기에는 동아시아가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동아시아는 고대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갈등과 협력 관계를 반복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무역을 통한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도 급증했고, 동아시아 일부 지역 내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임에도 한나절 생활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은데 때로는 동아시아의 문제가 곧 세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세계의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한 2019년 일본의 경제 도발은 단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WTO의 탁자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안이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의 문제이고 세계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서구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단지 여성의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구성원은 때로는 자국의 관점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등과 같은 거대한 사회 변동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구성원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각 나라의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편협한 사고나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은?

동아시아 시민도 세계시민이다. 특히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제 해결과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이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첫째, 동아시아 시민은 동아시아의 상호 관계를 경쟁이나 갈등만이 아니라, 신뢰와 유대 관계 속에서도 인식하면서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갈 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시민은 단지 자국의 이익이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관점, 더 나아가 지구적 관점을 기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는 과거사 문제, 국가 간 힘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고유의 역사와 문화도 뚜렷해서 민족주의적 대립도 강한 편이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초국적,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시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문제가 곧 지구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지역 문제의 해결이 곧 지구촌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하는데 왜 인천(지역사회)인가?

지역사회는 일정한 생활을 영위해가는 생활 공동체 또는 그것을 위한 지역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실제로 구성원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지구적 현상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설규주, 2001). 즉, 지구적 문제가 반드시 지구 전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과 같은 지역사회나 마을을 단위로 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개항을 했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있는 곳으로 국제 교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018년 기준으로 11만 5천명이 넘는다. 또한, 교육 혁신지구, 국제 업무지구 등과 같이 동아시아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적 자원도 풍

부하다. 이러한 인천의 다양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러시아 등과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동아시아 여러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인천의 ‘교육과정 지역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수요목기 이후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활동을 수행해 왔다. 일부 지역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도입되어 왔고 그나마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인천의 교육 자치 및 교육과정의 지역화, 맥락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4)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 동아시아 시민과 세계시민은 중복? 동아시아 시민과 세계시민은 남남?

세계시민교육이 이미 있는데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둘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계시민교육과 별도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과 동아시아 시민은 각각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가질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동아시아 시민과 세계시민은 단순히 중복되지도 않고 별개의 것도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관련 과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관련 과목에는 필수과목 <한국사>와 선택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있다. 사실 <한국사>와 <세계사>만으로도 특별히 배제되는 지역 없이 동서양 모든 역사를 아우를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왜 존재하는가? ⁴⁾

그것은 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밀접한 상호 교류의 역사를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보다는 좀 더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유럽의 어느 나라였다면 아마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유럽사>나 <서유럽사> 등을 선택과목으로 배우지 않았을까... 이러한 관계를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도 적용해 본다면,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일부분(동아

4) 물론 일부 주요한 사항은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모두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나 중복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에서 좀 더 심화하여 다루는 방식으로 차별화된다.

시아 관련 사항)을 확대하고 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게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별개의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사>가 <세계사>의 일부이듯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세계시민성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계시민성과 동아시아 시민성의 요소를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연 등(2015)은 세계시민성의 요소를 인류애, 지구적 정체성, 지구적 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에 관련되는 지식 및 가치와 기능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세계시민성의 요소	세계시민성 관련 지식	세계시민성 관련 가치와 기능
인류애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	인권 존중, 관용, 사회 정의 등을 지향
지구적 정체성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이해	지구촌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 및 태도
지구적 참여하기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이해	지구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참여

[그림 1] 세계시민성의 요소

첫째, 인류애(Humanity)는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정치 체제가 아닌 인간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구성 원리이며 세계시민성도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지구적 정체성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맥락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서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일상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세계관을 전 지구적인 문제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자질을 발휘하므로,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만의 특수한 관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형성하게 된다.

셋째, 지구적 참여는 세계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확장된 정체성(지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지구촌을 연관시키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를 인지하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연대하며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시간적 선후관계로 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상호 동등하고 순환적인 관계이며 다른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서로 요청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승연 외, 2015).

이 도식을 그대로 동아시아 시민성의 요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동아시아 시민성의 요소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지식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기능
인류애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	인권 존중, 관용, 사회 정의 등을 지향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세계화 및 동아시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지구촌 공동체 의식,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각 및 태도
동아시아에 참여하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이해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해결과 평화 공존을 위한 참여

[그림 2] 동아시아 시민성의 요소

㉠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패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말이 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등으로 번역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래 약 200년 정도 로마를 비롯한 지중해의 평화로운 시대를 가리킨다. 그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감히 주변에서 로마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 이후 19세기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영국은 ‘팍스 브리타니카’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렸다. 한때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성장했던 일본은 ‘팍스 자포니카’를 꿈꾸기도 했고 21세기 들어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로 불리는 중국의 야망을 가리켜 ‘팍스 차이나’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명칭은 매우 역설적이다. 팍스(pax)라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화가 아니다. 그 평화는 세계를 제패한 어느 특정 국가에 의한, 즉 패권을 통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쟁한다.’는 말처럼 강력한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경제력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좀 더 높여서 언젠가는 ‘팍스 코리아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까? 남북통일이 되면 인구 8,000만에 육박하는 제법 큰 나라가 되는데 그때쯤이면 가능할까? 만약 우리나라 힘만으로 버겁다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서 ‘팍스 아시아나’를 꿈꿔 보는 건 괜찮을까?

아니다. 모두 방향을 잘못 잡았다. 동아시아 지역 내 교류가 활성화되고 세계 속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자원 등과 같은 잠재력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팍스 아시아나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유럽이

나 미국 등 서구적 가치관과 제도, 서구 사람들에 의해 아시아가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으니 이제 덩치가 커진 동아시아의 힘을 한번 보여줄까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딱 거기서 멈춰야 한다. 물론 서구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합당한 비판을 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고자 하는 패권의식은 그 자체로도 시민교육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패거리의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 위험하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패권의식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한눈에 보기



1) 세 가지 교육의 관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과 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는 [그림 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⁵⁾ 이러한 관계 설정의 기준은 각 시민교육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이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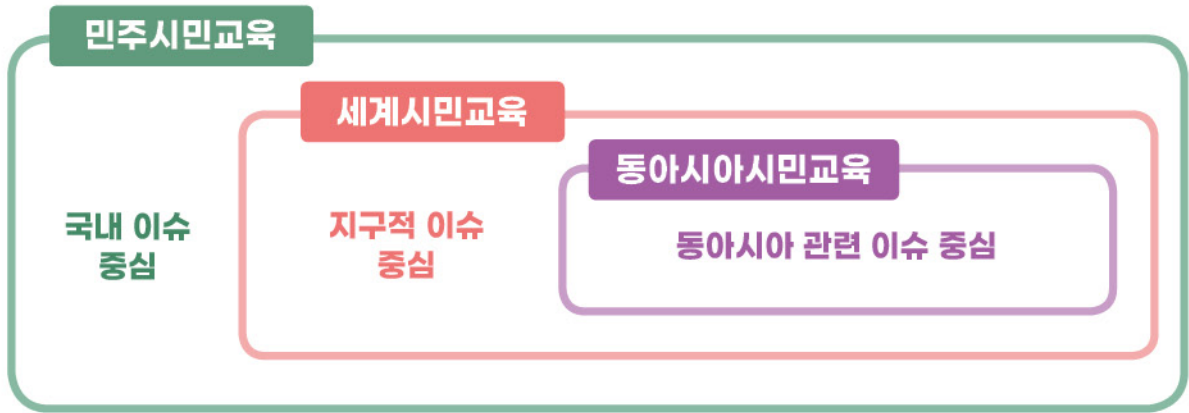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국내외 이슈를 넘나든다. 다만 전반적으로 국내적 이슈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보편적, 초국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대체로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들이다.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은 특히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제를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대체로 동아시아 관련 이슈이면서 지구적 차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각 시민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특성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은 당연히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임을 알 수 있으며, 세계시민 역시 당연히 민주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단, 이 도식은 세 가지 교육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므로 이 도식만으로 이 세 교육의 특징이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그림 3] 다루는 이슈를 기준으로 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관계

한편, 실제 시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의 예를 세 가지 시민교육에 적용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각 시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 (예)

소재의 예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갑질, 악성 댓글	◎	△	△
기후 변화, 테러리즘	○	◎	○
일본군 성노예, 베트남 전쟁	○	○	◎
코로나 19 감염병	◎	◎	◎

◎ 매우 적합 ○ 대체로 적합 △ 보통

갑질이나 악성 댓글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다른 나라에도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교육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기에 더 적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기후 변화나 테러리즘은 세 가지 시민교육 중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좀 더 적합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그 두 가지는 지구촌 전체를 아프게 하는 문제이고 심지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몇몇 당사국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구촌 공동의 문제인식과 대응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베트남 전쟁 등의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 다루기에 좀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되는 문제이면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소재는 세 가지 시민교육 모두 다룰 수 있다. 예컨대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와 개인의 인권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대유행하는 감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 정책의 정당성이나 외국인(특히 아시아인) 혐오 문제를 다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에서는 방역이나 외국인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소재로 하여 학습할 수 있다.

2) 세 가지 교육 비교

앞서 논의한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의 배경, 특징, 의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세 가지 교육 비교

구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공통점	•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함. •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의 능력을 강조함.		
배경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탈(脫)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 증가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 확대 및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 증가
의미	시민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이해하며 이를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초국가적 관점에서 지구촌의 당면 문제를 성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동아시아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특징	민주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의 해결을 견인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동아시아를 소재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내용 요소 ⁶⁾	• 시민, 사회참여 •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 선거, 선거권 • 자유, 자유의 실현 • 평등, 평등한 세상 • 연대, 복지, 국제 지원 • 인간다운 생활, 사회권 • 노동, 일자리 • 윤리적 경제, 공유 경제 • 미디어비평, 소셜미디어 • 다문화, 이주민 • 평화, 환경, 남북통일	• 지방·국가·세계체제와 구조 • 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슈 • 현상 이면에 있는 전제와 권력의 역학 관계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사람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이들의 연결 양상 • 차이 및 다양성 존중 •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행동에 참여, 실천하기	• 동아시아의 상호관계 • 동아시아의 역사와 변화 • 동아시아의 환경과 문화 •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 동아시아의 사회문제와 대응 •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참여

6) 내용 요소 내용 요소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마을과 연계한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참고하였다.

참고문헌

- 강영혜, 양승철, 유성상, 박현정(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경기도교육청(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 곽병선, 구자역, 김경숙, 김명숙, 김애송 등(1993). 민주시민교육: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8. 12. 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보도자료.
- 김성수, 신두철, 유평준, 정하윤(2015). 학교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 서울대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 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32, 151-178.
- 설규주, 김유란, 고은경, 정경화(2019). 마을과 연계한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설규주, 정원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이승연, 차조일, 설규주(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글로벌 시민성 분석: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2(1), 17-32.
- 이쌍철, 김미숙, 김태준, 이호준, 김정아, 강구섭, 설규주, 임희진(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춘(1980). 사회과교육과 국민정신교육. 사회과교육 13, 42-45.
- 정문성, 강대현, 설규주, 전영은(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 정원규, 김형철, 박인혜, 설규주, 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 차조일, 원준호(2013).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의 사회과 발전: 미국의 영향과 독일의 수용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3), 229-256.
- 한승희 외(200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정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Engle, S. H., & Ochoa, A. S.(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Decision making in the social studies.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정세구 외 역(1989). 민주시민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Soysal, Yasemin(1998). "Toward a postnational model of membership". In Shafir, Gherson(Ed.). The citizenship debat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02

인천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송태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노동이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과로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으로 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노동자가 노동과정 중에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노동인권 교육’이란 개념으로 확산된다(송태수 외, 2018).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노동연수원에서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다.

또한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로 보고 교육대상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송태수 외, 2018). 이러한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설정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추진하면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다각화되었다.

시·도교육청 별 노동인권 교육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부터 노동인권의 내용을 포함한 민주시민 교과서를 개발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개발해 각 고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15년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선택교과 개설을 완료하고 인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16년 노동인권전문관을 선발하여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2018년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송태수 외, 2018). 인천에서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시민단체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에는 인천교육정책연구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고, 2018년 교육감 공약사항에 초등학생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8년 10월 노동인권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파견되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인권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모두 관여하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고용노동연수원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2013년 개발한 민주시민 교과서나 2016년 개발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광주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인정도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연구한 노동인권 교재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8년 연구한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개발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 대상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 자료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개발된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부재하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각론 문서를 살펴보면, 해당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교과가 어떠한 교과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해당 교과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내용을 학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수업에서는 어떠한 교수학습으로 활용하며 평가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현재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는 존재하나 내용체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교육내용 및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이는 노동인권 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방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융합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노동인권 교육 자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가 다수이다. 송태수는 노동인권교육이 대처방안 중심인 “협회의 노동인권 교육”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광의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송태수 외, 2018; 송태수, 2019). 대처방안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 이외의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낮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낮추어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광의의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했을 때 광의의 노동인권 교육으로써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인권 교육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 개발된 노동인권 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과를 선택해 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도서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음을 참고했을 때 노동인권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낮을 것이다. 또한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반영해야 할 다수의 범교과 주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간 연계가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노동인권 교육이 재구성 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선택적이고 이벤트성으로 일부의 내용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정은 활용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존재의 의미가 약해진다. 노동인권 교육 역시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실질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광의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체계적인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개발 방향을 모색한 뒤 국가교육과정의 각론 문서체계를 참고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한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수립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의 사회적·학문적·학습자 요구를 분석한다.

② 둘째,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를 개발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개발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학교 급별 성취기준을 개발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검증한다.

③ 셋째,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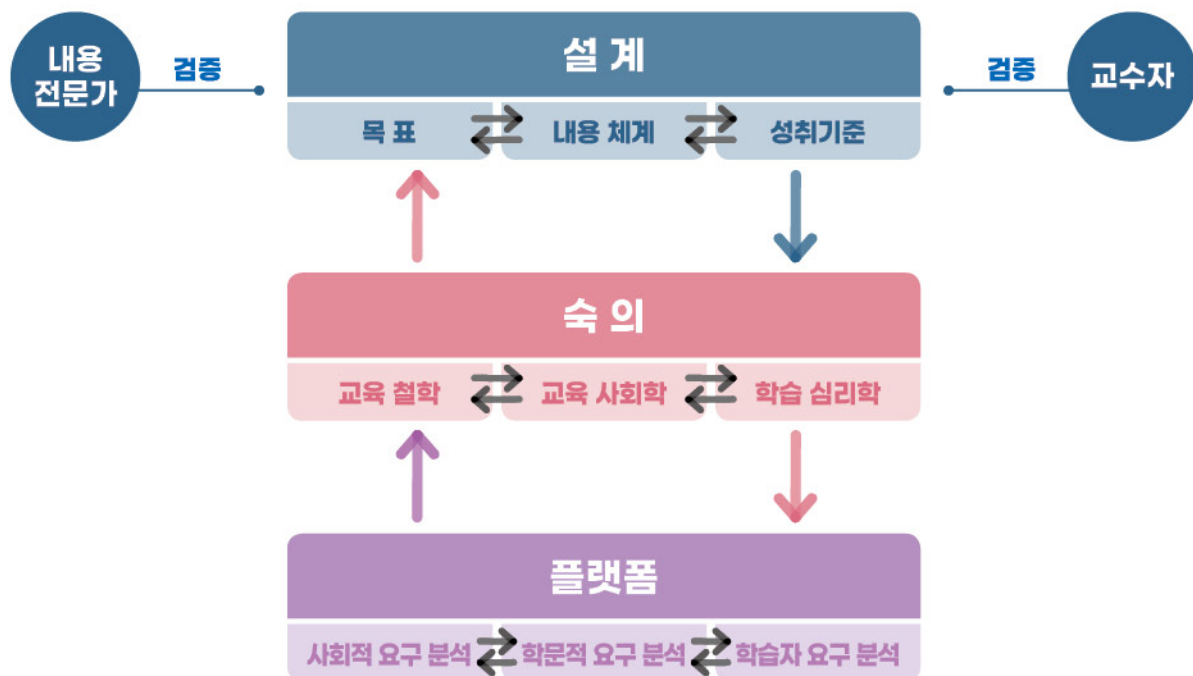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인권 교육의 개념과 발전과정, 노동인권 존중사회를 위한 실천, 진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교육과정 개발 이론 및 인천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였다.

Walker의 숙의적 방식으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Tyler 모형에서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원천(sources) 수집과 숙의를 통한 거름(screen) 방식으로 추출하였던 바, 학문적 요구분석과 사회적 요구 분석, 그리고 학습자 요구분석을 자료로 수집한 후, 공동연구진의 숙의과정에서 학습할만한 가치가 있는지(philosophical screen),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는지(sociological screen),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psychological screen)를 논의하였다.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을 도출을 목적으로 숙의과정을 거치고, 논의한 결과는 내용전문가와 교수자의 검증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공동연구진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 도출 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①교육과정 개발의 절차가 유연할 것, ②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할 것, ③우리나라 교육과정 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것, ④교육과정 개발 저경력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논의해 Walker의 숙의모형을 중심으로 Tyler 모형에서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원천과 체(screen)를 추출하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구성 요소를 참고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모형을 추출했다.



[그림1]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모형

플랫폼, 숙의, 설계의 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플랫폼, 숙의, 그리고 설계의 과정은 순차적이기보다 역동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모두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에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원천으로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참고해 사회적 요구분석, 학문적 요구분석, 학습자 요구분석을 설정했다. 이 세 가지 자료의 원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특징적인 점은 플랫폼에서 학문적 요구분석, 사회적 요구분석, 학습자 요구분석의 자료 수집 방식이었다. 노동인권 교육과정 부재 조건으로 학문적 요구분석이 어려웠던 조건에서 본 연구는 국내 노동인권 교육 인접 교육과정(사회과, 진로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를 종합해 노동인권 교육의 학문적 요구로 반영했다. 또한 국내·외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노동인권 교육의 학문적 요구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사회적 요구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정책과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 요구분석은 인천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천시 교육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노동인권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2019년 7월 5일부터 2019년 7월 16일까지 1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만족도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3개로 ①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여부, ②노동인권 교육을 진로·진학 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것에 찬반 여부, ③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이유를 개방형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¹⁾

①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모든 주체별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0% 이내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55.3%였으며(매우 필요: 31.1%, 대체로 필요: 24.2%) 교직원들은 70.5%(매우 필요: 33.4%, 대체로 필요: 37.1%), 학부모들은 66.3%(매우 필요: 35.9%, 대체로 필요: 30.4%)이었다. ②노동인권 교육을 진로·진학 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의 61.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매우 타당: 32.2%, 대체로 타당: 29.2%), 교직원들의 71.2%(매우 타당: 36.3%, 대체로 타당: 34.9%), 학부모들의 71.4%가 타당하다고 응답했다(매우 타당: 39.6%, 대체로 타당: 31.8%). 끝으로 ③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개방형질문으로 물은 결과, 먼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지적인 키워드는 “노동, 노동자, 인권, 필요, 교육, 권리, 가치, 사회, 생각, 기본, 자신, 민주, 존중, 인식, 중요, 이해, 생활”이었다. 이들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후 전반적 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며(인권, 권리, 기본, 생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태도,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가치, 사회, 민주, 교육, 의사, 생각),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교육(노동, 노동자, 인식, 자신, 존중, 이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1) 설문조사 대상 학교는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에 맞추어 Random Sampling한 150개를 선정했다. 대상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중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교사 734명, 중·고등학생 3,300명, 학부모 716명 총 4,750명의 결과를 자료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플랫폼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속의 과정을 중심으로 절차와 내용이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이론서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했다. 본 연구 기획 단계에서 교육과정의 어떠한 수준까지 도출해야 하는가를 국가교육과정 각론 문서를 기준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물론 관련 연구를 수집해 학습하며 논의했다. 특히 학교급별 위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위한 논의와 우수한 성취기준은 무엇을 고려하며 도출해야 하는가와 개발한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활용방안 관련 논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함을 고려해 노동인권 존중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소통과 공감, 협력과 연대)을 초안보다 대폭 강화해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을 구성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개인의 자아실현, 균형 있는 삶 모두를 추구해야 함을 고려해 “노동인권과 나의 삶”을 구성했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은 크게 세 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는 바,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 그리고 ▲노동인권과 나의 삶이다. 먼저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는 세 개의 핵심개념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필요성, 노동인권의 발전과정, 그리고 노동인권 보장제도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은 노동자와 노동인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과 연대로 구성된다. 끝으로 ‘노동인권과 나의 삶’은 건강한 노동관과 나의 진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나의 노동이라는 두 핵심개념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대영역 ‘노동인권과 나의 삶’에서 확인하듯이, 나의 진로는 나에게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나의 발전과 나의 행복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경로이면서 동시에 나의 진로설계는 사회적 존재로서 노동을 통하여 나를 실현하는 과정의 설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나의 노동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의 전제인 동시에 결과이다. 즉, 나의 진로설계는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한 나의 욕구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는 다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 나의 진로설계의 의미가 명확해질 때 우리는 ‘보수 많은 직업’ 선택으로만 귀착되지 않고 개별 직업이 일과 직업세계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며 모든 개별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노동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유,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성취기준 또한 학령·급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과정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학습하지만 노동인권의 발전과정과 그 보장제도는 다루지 않는다. 학령에 따라 성취기준도 달리 하여 학령에 적합한 수준에 대하여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급별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로 구분하여 성취기준을 달리 제시하였다. 그 중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종합
노동과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필요성	노동은 노동 분업 사회인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이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인정과 노동과정·관계에서 인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노동인권의 발전과정	노동인권은 인권의 발전과 함께 산업혁명 이후 발전해온 것으로, 세계사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등에도 확고히 자리 잡아 명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의 과정에 있는 권리이다.	역사 속 노동인권
			노동인권의 실태
	노동인권 보장제도	노동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선언된 이후, ILO가 지난 100년간 채택한 협약의 대부분은 우리 헌법 및 노동법 등에서 확고히 보장되었다.	노동인권의 보호제도
			노동인권 침해 유형과 대처방안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	노동자와 노동인권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는 노동관계·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의미와 범위
			다양한 노동과 노동자
	소통과 공감	타인의 노동인권을 인정하는 공감능력과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함양한다.	노동인권 감수성과 갈등해결
			노동인권과 미디어 리터러시 (문해력)
	협력과 연대	노동자들의 연대만 아니라 노사 간 대립적이면서도 상호존적인 속성을 이해하여 공동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사정 상생 협력을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연대
			상생을 위한 협력
노동 인권과 나의 삶	건강한 노동관과 나의 진로	나의 진로는 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나의 발전과 나의 행복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경로이며, 나의 진로설계는 사회적 존재로서 노동을 통하여 나를 실현하는 과정의 설계이다.	자기이해와 직업의식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노동인권
			나의 노동 가치와 진로설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나의 노동	나의 노동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유지·발전의 전제인 동시에 결과이며, 따라서 나의 노동 과정은 나의 삶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의 노동 균형 있는 삶과 나의 노동

[표1] 노동인권 교육과정 내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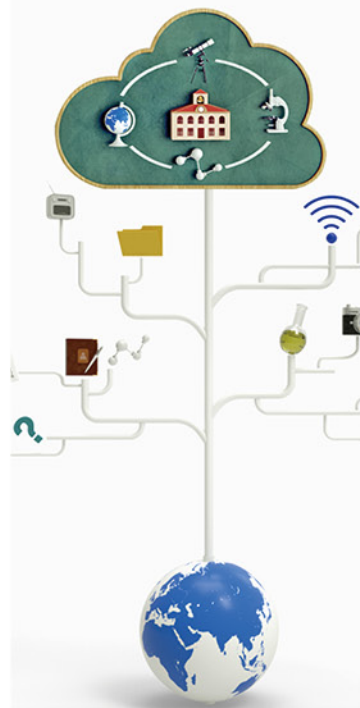
인천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은 노동과 노동인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태도, 기본개념, 법·제도, 합리적 의사결정, 현실 참여 등 교육의 영역별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노동인권 교육 교수·학습 방법은 노동인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대변하는 인간 행위 양식을 몸소 실행에 옮기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 인권적 상황을 개선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노동과 노

노동인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를 길러 노동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사회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본적인 노동인권 의미는 추상적 개념의 습득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인권 관련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노동인권의 기초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교수·방법으로는 노동인에 대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해한 뒤 생각을 공유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먼저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TV, 영화, 책, 법전, 사례, 신문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노동인권과 관련된 현장 체험, 역할극, 봉사활동 등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이해한 뒤 글쓰기, 발표, 토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교재의 토픽이나 내용을 답습하는 자료로 국한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필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노동인권이 일상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참여 경험을 쌓는 교수·학습 방법은 소규모의 참여형 수업방식을 보다 활성화하여 모의수업, 사례연구, 현장체험 등을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직접 노동자의 입장에 있는 현장실습 참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토론, 토의, 역할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 혹은 팀 단위 프로젝트 학습, PBL, 포트폴리오 작성 및 발표, 실천사례 발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 교육은 교과 활동 이외에 학생생활지도 영역에서 상응하는 인권 보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존중의 태도가 기본인 노동인권 교육과정에서는 교사·학생 간 상호관계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학생들 스스로 인권 신장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방법을 자율적으로 찾도록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에 간하지 않도록 교사는 탐색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전문가(노무사, 활동가, 상담사 등)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해당 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노동인에 대한 이해와 실천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 전반을 스스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이며 절대 평가이다.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접근은 노동인권 존중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관심을 기울여 평가한다.

노동인권의 기본 개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학생의 평가는 노동인권의식에 대한 감수성,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 태도 등 행동발달 특성을 평가한다. 또한 지필시험과 같은 암기식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평소의 생활태도에 대한 관찰 기록 등을 참고로 노동인에 대한 의식 정도와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행위성향에 근거한 노동인권교육은 인지능력에 기초한 노동인권 교육보다는 실제의 상황에서 노동인권 친화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기관리, 의사소통, 문제해결, 협력, 다양성 존중 역량에 맞게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하고 이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점수나 등급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무자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지속적인 공동연구진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진로교육과 융합해 ‘인천형 진로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활용방안은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진로교육과 통합되어 인천형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과정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회적 관점의 결여를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이며 현재의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기존의 진로교육과정과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융합해 유치원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체계적인 인천형 진로교육과정으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이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수업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17차시 중 3~4차시를 노동인권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즉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향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활용할 수 있다.

다. 직업교육에 반영 활용하는 방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직업교육에 인천 노동인권교육과정이 반영되거나 대체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다수 교과와의 연계 활용 방안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맵핑 자료 개발을 통해 타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노동인권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의 내용이 연계되어 노동인권을 통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 다수의 교과와 연계되기 위한 방안 및 맵핑 자료 개발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마. 단독 교과 개발 활용 방안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단독교과로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내용 구성(안)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단독교과로 개발해 인정 교과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성격 및 특징을 간략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 교육 구성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2018년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 인천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인천교육과정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학교 급 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인천 교육 구성원의 요구를 담은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교육과정보다 인천의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삶의 힘이 자라나는 미래시민 교육과정이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가치, 기능, 태도, 그리고 실천을 포함해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내포되어 논쟁적이며, 이러한 논쟁 과정을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하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실 내 교육공동체 간 생각을 공유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이러한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과정이다.

셋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특성화계 고등학교 간 위계적인 교육과정이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기획 단계부터 학교·급 별 교사가 능동적인 개발자로 참여해 학교·급 별 위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교육과정의 위계화를 위해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또한 지속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학교·급 별 성장발달 단계를 공유하고 반영했다.

넷째, 개인의 자아실현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속 민주시민 양성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내용체계가 한 사람의 인권으로 시작해 사회 속 민주시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자신의 삶에 이러한 맥락과 가치를 적용해 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자신과 타인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침해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문제해결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성격 및 특징을 지니는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은 전국 최초의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완결성을 가지고 개발된 노동인권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송태수, 이원희 외(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태수(2019).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03

블렌디드 수업과 교육과정-수업-평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배수아

블렌디드 수업의 현재

코로나19가 종료될 줄 알았으나, 여전히 모니터 속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2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학교는 교육의 변화를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식 전달형의 콘텐츠 나열 속에 교사와 학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코로나로 시작된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에 갇혀 우리 아이들의 ‘오늘’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는 그런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으로 미래교육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래는 학교현장에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다.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혁신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0년 교육정책포럼 9월호'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 달 교육부는 블렌디드 수업(Blended learning)과 학교급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환경을 혼합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하고 원격수업 간, 원격수업·등교수업 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블렌디드 수업의 장점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의 선수학습 역할을 하고, 또 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학생맞춤형 교육과 학습한 내용의 평가와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블렌디드 수업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교육체제라 할 수 있다.

< 블렌디드 수업 모형 예시 > ¹⁾

구 분	세부 모형 예시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	1-1 콘텐츠 활용 수업(예습)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1-2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1-3 콘텐츠 활용 수업 + 과제수행형 원격수업+쌍방향 원격수업
원격수업 + 등교수업 간 블렌디드	2-1 원격수업(예습학습) + 등교수업(피드백, 프로젝트학습 등) 모형
	2-2 등교수업(핵심개념학습) + 원격수업(확인과제학습·피드백)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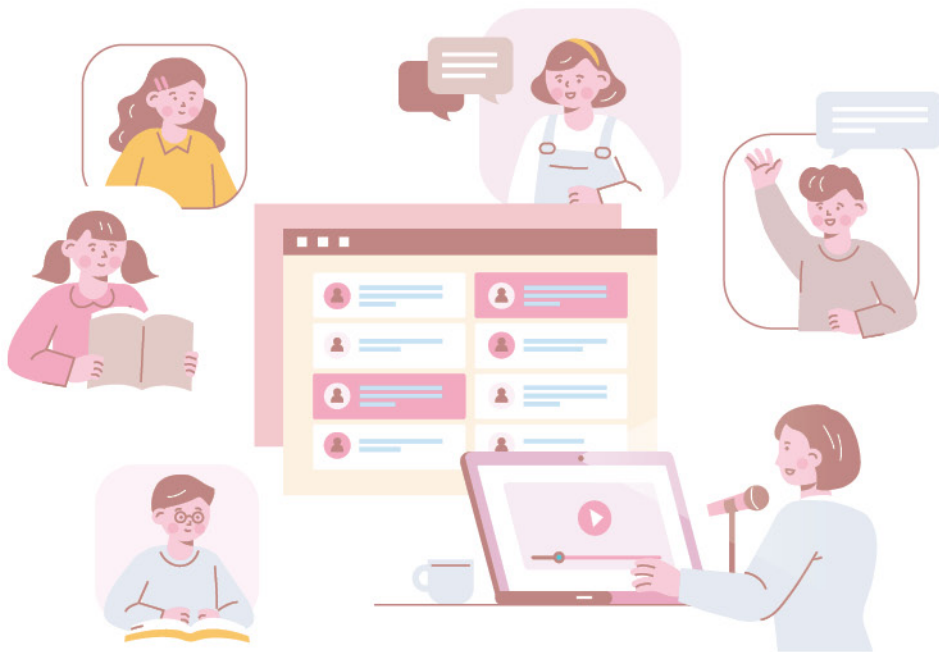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진행 중이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시작된 원격수업이기에 준비가 미흡했고 등교수업 제한이 지속되면서 교육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수행평가 반영 비율과 횟수를 축소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학교 현장은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학교는 가정에서 원격으로 학습한 후 등교수업에서는 원격학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몰아쳐서 실시했다. 학생들과 교사에게는 이런 평가가 부담이 되었고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학기부터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1, 2 단계에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게 했다.



< 학교급별 평가 기준 > ²⁾

구분		초	중	자유학기	고
평가	1·2단계	- 성적 미산출 - 수행평가 선택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 성적 미산출 - 평가 실시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3단계	수행평가 선택 (평가 미실시 가능)	(1·2학년) 평가 미실시 가능(P)		

이렇게 되면 입시 및 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3 및 고등학교의 대다수는 평가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등교일을 정해 지필고사만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원격수업이 지속되고 학교들이 지필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간다면, 수업에서 수행평가와 같은 과정중심 평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콘텐츠 링크를 걸어주고 교육활동 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곳은 꼭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1), 2)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2020.8.교육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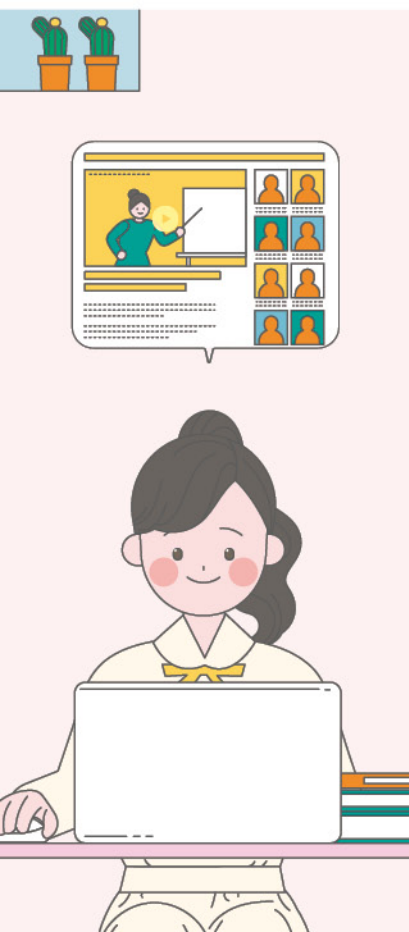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한 과제

학교는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 보는 장소가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어야 한다. 블렌디드 수업에서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연계성 및 평가 등 여러 고민 지점들이 있다. 또한 개별 학생들의 학습 관리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습동기 유발의 어려움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리고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학습을 통합할 수 있을까?

블렌디드 수업도 하나의 교수-학습 전략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배움의 과정과 평가가 연계되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블렌디드 수업과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어떻게 맞물리게 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 성취기준을 블렌디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환경과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해서는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학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령, 온라인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이 이미 성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 보다 상위 수준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반면에 학업 결손이 있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교과학습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해 학생의 실질적 성취를 중시하고 교육 과정에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능력과 소질 등의 특성을 반영해 학생의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도와야 한다.





📖 교사별 교육과정 재구성과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블렌디드 수업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학생의 학습 수준과 학습 패턴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학생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의 학습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획일적인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교사별 교육과정 재구정으로 학습주제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교육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시기와 평가 횟수를 다르게 실시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동반되어야 한다.

📖 학생참여 중심수업으로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중요하다. 원격수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과서의 진도 나가기에 중점을 둔다면 학생참여 없이 교사가 주도하는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가 주가 될 것이다.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배움의 촉진자, 지원자가 되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이 수업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참여하여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학생주도 학습과 학생참여를 통한 협력적 배움이 통합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수업, 프로젝트(PBL)기반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주제별로 토론방을 만들어 토론하거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등교수업에서 적용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안해야 한다.



📖 과정중심 평가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패턴, 학습 행동 및 특징 등을 관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의 혁신 없이는 수업이 바뀔 수 없다.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정도를 관찰하고 평가한 후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간극을 메꾸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활용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격수업에서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학생들이 협업,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성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를 구안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성장하는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피드백으로 학습을 도와야 한다. 교사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도와 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인 맞춤형 학습을 확산할 수 있다. 피드백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수업 지도의 방안이다. 실시간 쌍방향이나 단방향의 수업이나의 방식의 논의보다 피드백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개별 결과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개별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퀴즈를 활용한 형성평가로 학습을 진단하고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는 등 학생의 학습을 격려할 수 있다.



📖 학생주도의 개별학습과 공동체적 학습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수업모형과 사례들을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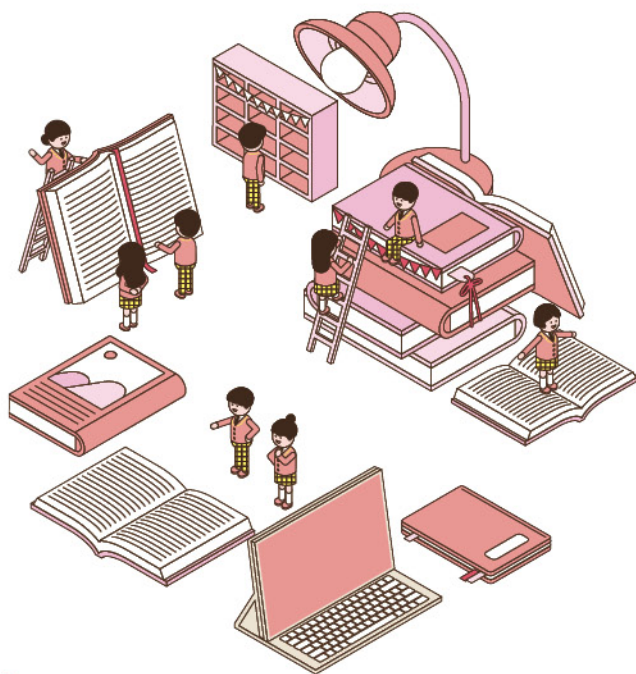
학습 주제에 따라 개별학습이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하고 실습과 체험 중심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등교수업에서 서로 보완하여 이루어진다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령 디지털 위성지도를 활용한 수업을 듣고 학습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댓글을 다는 활동 등을 누적하여 참여도에 반영할 수 있고 등교수업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활동, 예를 들면 게시판을 이용한 찬반 의견나누기, 교과채팅창에서 질의응답 등은 학생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여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수업모형 개발과 더불어 온라인 참여에 있어서의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나 결과물을 수행평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시작, 블렌디드 수업

코로나19와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배움을 이어나가기 힘들게 되었다. 비대면수업이 일상화 되고 온라인 공간이 배움의 주된 공간이 되면서 새로운 관점의 교육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과거의 우리 교육은 항해의 과정이 없는 정답 찾기 교육이었다.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항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프랑스의 교실은 연필과 지우개가 없이 만년필만 있다. 정답이 틀리더라도 문제를 풀었던 과정을 지워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줄로 긋고 수정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우리 교육도 결과중심의 정답 찾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습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이 유의미하게 이루어 지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2015~2020

2015년 연구과제명

- 2015 행복배움학교 1차 년도 성과 분석
-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15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2015 행복배움학교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01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학교에 관한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언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 사업 실태 분석(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혁신 정책 연구 사례집
- 국제이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 초등 평가 방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2016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연구 : 2년차 행복배움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공모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 교원연수 실태분석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관리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교육 중·단기 발전방향 연구(1차년도)
- 공감100°C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평화의 길을 여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문화 만들기
-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야기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사례 모음집
-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 인천형 교원연수모형 개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2차) 개선방안
- 인천형 학교혁신문화 측정도구 개발
- 인천 생태환경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
- 학교와 지역 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인천형 교원연수 모형 후속 연구

2017 연구과제명

- 행복배움학교 발전 방안 연구
- 2017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유아체험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 교무행정지원팀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실태 분석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요소 개발 연구
- 고등학교 핵심역량 기반 평가모델 연구 -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 중심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교무학사·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연구
- 중학교 신입생 반배치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탐색 연구
- 효율적 교육정책(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평가 방안

- 초등 예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러닝 활용 방안
-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2차년도 연구)
-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 미래학교 환경 및 공간 구성 방안 연구
- 초·중·고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클 프로세스를 통한 학생자치회의를 중심으로
- 인권교육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지역(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8 연구과제명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개선
- 인천 학교혁신 실태조사
- 교직원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사양성 개선방안
-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교과별 과정중심 수행평가-기록 개선 방안 연구
-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식조사 및 방안
-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선 방안 연구
-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개발 방안 연구
- 지역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
-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직원의 학교 적응 지원 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전문직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지원 방안
- 학부모 학교 민원 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지원방안 연구
- 학교 환경과 공간 구성 방안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2019 연구과제명

- 인천 대안교육 발전 방안
-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연구
-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인천형 교육정책 개발
- 전국네트워크 과제 연구: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
- 필수 연수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 인천광역시 학생 자살 예방 관련 연구
-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연구
- 인천 미래학교 공간 혁신

2020 연구과제명

-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평가도구 개발
-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개발(초, 중, 고)
- 동아시아시민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모델 개발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데이터 활용 방안 및 플랫폼 구성 방안 탐색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초등학생 성장 발달 단계 연구
- 강화군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연구
- 인천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위학교 정보제공 방안
-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정책 방향
-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학생선거교육 방향 연구
-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인천중등학교 수행평가 실태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원방안
- 학교업무정상화 사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직무 여건 지원 방안 연구

인천교육을 들여다보다, ZOOM IN

이슈 줌인

<이슈 줌인>에 원고를 투고하시거나, 메일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420-8207

✉ bs00a@ice.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